

‘특혜 시비’ 복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중단

광주시, 잇단 비판 일자 5억원 지원 안기로

시민단체, 시청에 게양된 새마을기 철거도

세금을 투입해 지으려다가 특혜 시비가 일었던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광주일보 2016년 10월17일·12월26일자 6면>이 중단됐다. 건립비 예산 5억원을 반영했던 광주시가 시민들의 비판 여론에 밀려 지원 계획을 잠정중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마을회의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기로 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광주시는 올해 복구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편성한 5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에 복구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으로 5억원을 반영했다. 전체 예산 12억5000만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건립부지료 대체), 새마을회 자부담 2억5000만원 등이다.

복구가 제공한 우산동 인근 구유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사무실, 회의실, 마을기업, 문화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광주에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지부 건물은 있지만, 별도의 자치구 지회 건물은 없다.

하지만 회관 건립비 편성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청산해야 할 유물에 예산이 지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자구노력과 시민 여론을 반영한 쇄신안을 지켜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중단된 건

립비를 다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광주시청 앞에 게양된 새마을기도 내려졌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시가 게양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강제로 새마을기를 철거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새마을기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역 9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회관 건립 중지과 새마을기 철거”를 촉구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이 엄중한 때에 박정희의 유신 망령이 광주에서 부활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복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 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가 특정단체의 회관 건립에 시민들의 혈세를 왜 지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설령 회관이 필요하다면 새마을회 자체로 마련하면 될 것이 가뜰이나 부족한 혈세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적폐 청산이 화두인데 정작 광주의 시계추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적폐를 키우는 것은 150만 촛불민심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내려지는 새마을기

광주지역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국기게양대에 걸린 새마을기를 철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리베이트 수첩’ 확보… 광주지역 병원·제약업체 수사

총경급 등 경찰 이름 담겨

언급된 병원장 투신 자살

유족, 수사 문제 제기 파장

경찰이 광주의 한 약품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관련 수첩을 확보하고 지역 병원·제약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첩에는 총경급을 포함한 몇몇 경찰장 이름이 언급돼있는데다, 수첩에 언급된 광주지역 병원장이 최근 자택에서 투신자살을 하고 유족 측이 경찰 수

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광주 A병원 원장 B씨가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조사 과정에서 B씨 유족 측은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에 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말 광주지역 C약품 도매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첩에는 리베이트 관련 범죄 혐의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측 문제제기에 따라 당시 수사관, 수사 지휘자

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뜻하지 않게 경찰 조직을 술렁이게 한 리베이트 수사는 애초 지난해 8월 경찰에 접수된 진정에서 시작했다. “광주 D약품 도매업체가 광주 E병원 관계자에게 15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줬다”는 익명 제보였다.

4개월간 내사를 진행한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리베이트가 의심되나 채용증서, 계좌 입금, 이자지급, 자금사용 내용이 투명한 만큼 내사 종결하고 추가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간부 F씨는 수사관을 교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문제의 수첩을 압수한다.

내사 종결 대신 수사관 교체 후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다수의 경찰은 “진정서에 언급된 D약품업체 대표와 총경 G씨가 친구사이인데다, G씨가 인사 편점을 둘러싸고 F씨와 12월 초 큰 충돌이 있었던 점과 무관지 않다”고 전했다. 총경 G씨는 경찰의 약품업체 압수수색 전 정가 인사에 의해 근무직을 잃었다.

이에 대해 현 수사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 범죄 혐의가 드러난 리베이트 관련 수사, 명단에 오른 경찰관 처리 등 모든 부분을 의혹 없이 맡기로 털어내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박서 기름 유출돼 해경이 방제 했다면…

광주고법 “선사가 비용 배상하라”

해양 사고로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를 했다면, 선사는 방제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해경)가 화물선 A호(1400t급·벨리즈 국적)의 선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양오염 방제비용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이 투입한 방제비용 1억5639

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으로 향해 중이던 A호는 지난 2013년 5월26일 완도군 보길도 해상에서 불이 났다. A호에는 승선원 9명이 있었으며 병커C유 22㎥, 경유 6㎥가 적재됐다. 화재 신고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승선원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해경은 배가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표류하면서 침몰과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비함정 3척, 소화포 15㎥, 해

수 등을 이용해 10시간가량 진화작업을 하고 기름 유출 가능 지점을 봉쇄했다. 경비정을 이용, 배를 안전해역으로 일단 이동시켰고 6월17일 목표의 조전소로 배를 옮겼다.

해경은 “선사 측에 대규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화재 진압, 안전해역 유도 등의 활동을 했다”며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화재 진압, 표류 감시는 해경의 일반적인 구조 활동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조치는 기름 유출로 인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유류

오염배상법에 정한 ‘방제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번 사고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해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승선원들은 배에 기름이 남아있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대피했다”며 “배가 표류한 해역은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양식어장이 산재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다.

해경 조치 당시 화재가 지속하거나 침몰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재된 기름이 그대로 유출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투병 아내와 요양원 다녀오다…

‘80대 잉꼬부부’ 안타까운 죽음

추돌사고로 함께 숨겨

“할아버지가 아픈 할머니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던 잉꼬부부였어요.”

병든 아내의 재활치료를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80대 노부부가 교통사고로 숨겨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A(80) 할아버지 부부는 동네에서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A 할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재활치료를 받는 아내(80)를 위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편도 10km 이상 떨어진 요양원의 노인주간보호센터까지 직접 운전운 했다.

센터에서 차량 서비스를 제공했지

만, 버스 운전기사를 하다가 퇴직한 A 할아버지는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가 함께 장터 구경도 하고 귀가하며 할머니를 기쁘게 했다.

몇 마지막이 되지 않는 농부사를 지으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을 받던 노부부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늘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다.

A 할아버지는 지난 18일 오후에도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께 광산구 오운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25t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해 추돌했고 이날이 부부의 마지막 귀갓길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일부 무죄 선고 남영전구 수은 중독

검찰 “심각성 비해 형량 낮다” 항소

광주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남영전구 수은 중독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수은의 관리 부실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선고 형량이 낮다고 판단, 벌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지법은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과 함께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보(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남영전구의 신모(58) 총괄책임자

와 박모(48) 관리감독자에게는 각각 징

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실제 공사를 담당한 협력업체 장모(55) 현장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영전구 모기업의 안전기술담당자는 관리(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남영전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남영전구 집단 수은 중독 사태는 현재 사망자가 없을 뿐이지 10~20년 뒤 중독 근로자들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잔류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는 물론 현장·안전관리·최고 관리자 모두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성 살해 집 마당 암매장 50대 징역 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 마당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중)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5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여·59)씨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마당 장독대 바닥에 묻어 은닉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손씨가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자신의 집에서 식

사 도중 과도를 순간적으로 휘두르는 등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7일 순천시 서면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순천경찰은 숨진 A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범행 1주일여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부산의 한 공원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적장에 있는 이웃 속여 1억 넘는 돈 ‘야금야금’

○~지적장에 증세가 있는 이웃과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야금야금 가로챈 1번 이웃이 철창행.

○~19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임모(46)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인인 A(55)씨로부터

수령금 7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인삼밭 정비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봐라 그랬다”고 A씨를 속여 낸(3300m)을 팔게끔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데 대부분 생활비와 휴흥비로 탕진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12845	1	남구 충무로332-11, 105동 7층 701호 [층 제2지구충무엑스-클래스아파트] 84.9833㎡	아파트	330,000,000	
2016타경 62741	1	동구 방실로147, 두왕타운 제111동 제2층 제202호 94.58㎡	아파트	200,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6타경 8238	1	동구 의재로35번길 25-13 26.44㎡ [이촌향 지선1064/1089전부] 제시외 가구 등 27.6㎡	단독주택	44,658,75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11453	1	화순군 도암면 등골리 5 212㎡	답	74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742,000원, 맹지, 목갈
	2	동소 6 2136㎡	답	7,47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7,476,000원, 맹지, 목갈
	3	동소 8 489㎡	답	1,711,500	농지취득자격증명 1,711,500원, 맹지, 목갈
	4	동소 9 678㎡	답	2,847,600	농지취득자격증명 2,847,600원, 맹지, 목갈
	5	동소 산14 1190㎡ [김창식지분3분의1전부, 제시외건물등매각제외, 본포2가소채, 맹지]	임야	1,467,79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토지만매각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12142	1	장성군 서상면 대덕리 산8-1 14975㎡ [한동 호지분1/2전부] 동소 산8-2 3074㎡ [한동호지분1/2전부] 동소 산8-3 793㎡ [한동호지분1/2전부] 동소 산8-4 198㎡ [한동호지분1/2전부]	임야	58,677,150 58,677,150	일괄매각, 지분매수권행사제한, 본포소재부확인불가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6타경 13374	1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빌딩60-5, 7층 703호 [월계동, 무등애크로클래스] 19.9836㎡	근린시설	72,000,000 72,000,000	
[자동차, 중기]					
2016타경 20136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월계로 59, 209동 302호 [침단호반2차아파트] 등록번호:41부7251 차형:싼타페 [SANTAFE] 연식:2013	자동차	20,000,000	보관:광주광산구 상안길314-16丙수원컨테이너하우스
2016타경 65153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비아로147번길 8-12, 2층 [비아동] 등록번호:26010743 차형:그랜저 연식:2012	자동차	1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 산전점동156번대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형상부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합법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되는 경우 그 공유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2. 3.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2. 10.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일합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본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약제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② 2회 이상에 광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제도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단, 재매각기일은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차관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재매각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이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최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결과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원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자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단, 재매각기일은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차관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재매각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이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금,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담금의 일괄주의를 위하여 매수인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본을 지시로 첨부하고, 국민주택재난피해방범조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속박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부당권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전소유와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현상인고를 하고 그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나, 시외 지목신청을 마친 후이전에 있을 때에는 그 입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합법(합판)실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한 결과를 얻으신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명령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청보증금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원은 입찰명령을 받은 입찰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매각허가신청인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탈제확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할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번호에 매각기일과 판매 대상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집행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한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판례에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재주자가 재무를 반대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9. 매각결과 공고와 조치
① 매각결과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민원공고] → 판례명[매달보판례]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마포데 열람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관심을 위하여 미리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게 상고나 항고, 대법원재판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공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우